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11월

## KREI 논문경진대회, “탐구 열정으로 가득”

### 27개 대학 47편 논문 경쟁, 11월 25일 발표대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제1회 KREI 논문경진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KREI)은 11월 2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KREI 논문경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논문경진대회는 농업 관련 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정책을 발굴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 대학원부 대상, 서울대 강마야 수상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이번 논문경진대회에 참가한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있어 우리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해 더 좋은 연구를 하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길 당부했다.

이번 제1회 KREI 논문경진대회에는 27개 대학에서 대학생 25편, 대학원생 22편, 총 47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정환 위원장을 비롯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운영하였다.

#### 대학부 대상, 충북대 박지원 수상

대학원부 △대상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마야 학생이 발표한 ‘한국 농가의 인적 자본 스톡 추정’ 논문이 선정되어 상패와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번석 학생이 발표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국제 옥수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논문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혜진 학생의 ‘혼합로짓 모형을 이용한 다목적지 여행의 경제적 가치 평가’ 논문이 선정되어 상패와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 △탐구상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태우 학생이 제출한 ‘소득수준별 농식품 수요함수 추정’ 논문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안선진 학생의 ‘한·중·일 김치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과 한류의 확산이 한국의 김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이 선정되어 상패와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부 △대상은 충북대 박지원 학생이 발표한 ‘양돈산업의 미래 -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있어서의 사회적 후생분석’ 논문이 선정되어 상패와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서영·유지상·이한빈 학생이 발표한 ‘쇠고기 수입개방이 등급별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과 전남대 윤영석·정호연·조우석 학생이 발표한 ‘소비자가 평가한 농산물 안전성 기준에 관한 연구’ 논문이 선정되어 상패와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탐구상은 경상대학교 하용현 학생이 발표한 ‘농산물 파생상품거래 도입 가능성 검토’ 논문과 경북대학교 김지윤·이상희 학생이 발표한 ‘탄소 성적표지제를 활용한 국내 농산물 소비 증가 유도 방안’ 논문이 선정되어 상패와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증대

이번 논문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KREI 논문경진대회 심사를 총괄한 이정환 심사위원장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제출한 논문의 질도 높았지만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곳곳에 녹아 있어 유익한 경진대회였다”고 평하며, “비록 등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우수한 논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논문경진대회 개최 경험을 살려서 제2회 논문경진대회를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쌀 수급안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연구원은 11월 25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쌀 수급 안정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11월 25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쌀 수급 안정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어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이 ‘쌀 수급현황과 전망,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뒤 토론했다.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의무수입 쌀(MMA)이 늘어나고 있으며 쌀 소비량도 감소 추세이고, 연이은 풍작 영향으로 재고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시나리오별 국내 쌀 수급 및 가격 분석을 통한 중장기 쌀수급 전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일시적 생산과잉 대책으로 작황지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용도제한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쌀 소비축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은 생산자 중심의 전략으로 쌀 수급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고 정부는 쌀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가격이 하락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점, 일시적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안정 방안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은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 사회로 열려 전남 함평 박정재 쌀재배 농가, 전남 부안계화실업 반득용 사장, 서강대학교 사공용 교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 농림수산물식품부 임정빈 식량정책과장, 한국일보 이상철 경제부장, 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이 쌀 수급 안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 농경토론회 3차례 개최

연구원은 11월 18일 중회의실에서 ‘2009 OECD 농촌개발회의 의제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마상진 부연구위원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7차 OECD 농촌개발 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농촌지역 사회의 대응, 농촌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요인,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와 농촌개발의 대응 등의 현안에 대하여 농촌개발 관련 주요 전문가 발표와 각국의 사례 내용을 발표했다.

11월 24일 중회의실에서 ‘북해도 농업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하여 최병옥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북해도 농업의 현황을 설명한 뒤 북해도 지역농협의 토마토 경제사업, 샷포로 지산지소 브랜드 히베스트랜드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해도 지역의 농업후계자 육성과 축산업을 설명한 뒤 우리 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11월 27일 중회의실에서 ‘수직적 차별화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 변화에 따른 사회 후생 변화 분석-쇠고기 시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전상곤 부연구위원은 쇠고기 등급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 정도와 만족도를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 충남 청양에서 벤처농업전문아카데미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충남 청양에서 11회 벤처농업전문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 부설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11월 4일 충남 청양군 문예회관에서 11회 벤처농업전문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성재 부원장은 “청정도시인 청양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식품산업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동안 벤처아카데미를 총 11회 개최해 1천여 명의 벤처농업인이 수강해

벤처농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시환 청양군수가 환영사를 했다.

우리 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이 ‘농업과 연계한 정부의 식품과 산업추진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이어 식품기술사협회 이형재

회장이 ‘환경 친화적 식품산업의 발전방향 제언’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주)도올 F&B 강덕원 대표와 우리농연구회 정재환 대표가 사례발표를 했다. 연구원 벤처농기업 입주업체인 (주)바이오믹스 홍성빈 대표가 ‘특작물 가공산업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 유도해야

박 동 규 선임연구위원

올해 쌀 생산량은 10a당 534kg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에 520kg을 기록한 이후 연이은 풍작으로 쌀 가격이 하락했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제(이하 쌀 직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쌀 가격 하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쌀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에만 전념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 쌀 공급 과잉 현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쌀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목표가격에 대한 불안감 해소

쌀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5%를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가가 시장에 판매한 쌀 가격과 정부에서 받는 직불금을 포함한 수취가격은 목표가격 수준에서 안정된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의 쌀 직불금 재정만 늘어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농민단체에서 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목표가격이 쌀 가격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5년 후 목표가격은 쌀 가격 등락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향후 80kg당 목표가격은 15만 원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목표가격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기도 한다.

농가의 주장대로 생산비를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목표가격을 현재 수준에서 고정하여 농가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미국이 1996농업법 도입 시 설정한 목표가격을 2013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목표가격만 고정하는 조치는 농가에 쌀 생산을 더욱 장려하여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인 '벼 재배'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008년 104만 6,000ha의 논 면적 중 11만 2,000ha에서는 벼 이외의 작물이 재배되고 1만 4,300ha가 휴경되었다. 변동직불금을 포기하고 12만 6,000여 ha에서 벼 이외의 작물이 재배되거나 휴경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직불금 대상 면적이 101만 3,000ha인데 이중 93만 2,000ha에서만 벼를 재배하고 변동직불금을 신청하였다. 8만 1,000ha는 변동직불금을 포기하고 휴경하거나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인 '벼 재배'를 완화하면 논 일부는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의 수익성이 있는 작목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완화

생산조정제가 수급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이 1960년대 중반에 쌀 공급과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65만 ha를 대상으로 생산조정을 시작하였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 면적은 100만 ha 이상으로 늘어나고 재정부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미국도 1996년 농업법 도입 시 면적의 15%를 휴경하도록 하던 생산조정제를 폐지하고 농가 스스로 시장 수요에 의해 재배 작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생산조정제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만도 쌀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생산조정제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다.

특정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

작을 유도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쌀과 생산경쟁 품목의 수익이 동일하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전작을 통해 쌀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전작의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전작 지원으로 특정 품목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해당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다. 기존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던 농가의 소득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 가격이 낮아야 소비도 촉진

추세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여도 작년과 올해 같은 연이은 풍년이 있을 수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일정 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생산량이 결정된 후 사후적으로 시장격리 물량을 결정하므로 그동안 시장 참여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동요하게 된다. 유통업체는 격리한 물량이 언제, 얼마나 시장에 다시 방출될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므로 시장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작황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격리한 물량을 가공용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측면의 정책과 함께 수요 촉진을 위해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쌀 가격이 대체원료인 밀보다 5배 이상 높고, 가공비용도 2.5배 이상이므로 쌀을 가공품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008년에 kg당 2.3달러이던 수출가격이 2009년(1월~10월)에는 1.8달러로 하락하였고 수출량은 356톤에서 3,045톤으로 늘어났다.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도 확대하기 위해서 쌀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R**



## 북한에 쌀을 보내려면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지난 11월 17일 전국 15,000여 명의 농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공원에서 농민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이 대북 쌀 지원 중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북 쌀 지원 등 쌀값 대책을 촉구하였다.

필자는 농업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살려내라고 북한 당국에게도 함께 호소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 한국, 국제사회 대북 지원 1/3 차지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아사자가 북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지 십수년이 지났건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을 위해 식량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조차 싫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995년부터 북한에 식량지원을 개시하여 1999년에는 그 양이 연간 100만 톤에 이르렀으며 2001년에는 150만 톤에 달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연간 식량소요량을 520만 톤이라고 가정하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2000년부터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된 쌀이 240만 톤, 옥수수가 20만 톤이다. 정부는 차관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 또는 유엔기구를 통한 다자지원 형태로도 80여 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340만 톤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1/3에 해당한다.

2005년 북한은 불췌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평양에 상주하던 유엔 직원 및 국제민간 구호단체 대표를 추방해버렸다. 그들이 지원한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방식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국제사회가 식량위기에 직면한 국가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은 다른 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불만을 품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처사다.

### 북한, 태도 바뀌야

북한이 취한 행동은 곧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급감이란 결과를 낳았다.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량은 전년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7년에도 한국의 대북 쌀 지원이 없었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2008년과 2009년은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총 지원량은 30만 톤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 북한은 2007년 큰 규모의 홍수피해를 당했고 2008년에는 좋은 기상여건 하에서도 겨우 평년작 정도의 작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금년에는 비료 부족으로 인하여 200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작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가 1990년 중반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북 쌀 지원은 우리가 중단했다기보다는 북한이 먼저 거절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른다. 우리 농업인들이 주장하

듯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대북 쌀 지원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년부터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정책을 기존의 차관형식에서 무상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이제 북한에 쌀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북 쌀 지원이 일어나려면 북한이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에 동의해야 한다.

### 인도지원 원칙 중요

첫째, 북한의 누구에게 쌀을 나누어 줄 것인지 대상자를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즉, 수혜자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지원된 쌀이 선정된 대상자에 제대로 분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분배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혜자가 지원된 식량을 섭취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식량지원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영양조사의 방식으로 확인한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원한다면 이 정도는 동의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없다. 유독 북한만이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정부에 대해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기 이전에 먼저 북한 당국에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남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의 대북지원 관행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흐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인도지원 원칙을 어길 경우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량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R**

# 세계 쌀, 아시아 생산감소로 국제가격 상승

김태곤 연구위원

쌀 국제가격이 상승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인도와 필리핀에서 기상이변에 의해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국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수출이 줄어드는 등 아시아에서 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아시아에서 쌀 폭동이 있었다. 생산 감소와 주요 수출국의 수출금지로 가격이 폭등하고 물량확보가 곤란하여 식량폭동이 발생한 것이다. 세계 기아인구와 선진국의 빈곤인구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쌀 파동이 발생할 것인지, 이에 대비한 대응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세계 기아인구와 선진국의 빈곤을 확대

쌀은 아시아 몬순지역의 논농업에 적합하고 인구부양 능력이 뛰어난 작물이다. 주요 생산국은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일본 등 모두 아시아 국가다. 최근 국별 수급상황을 보면, 태국·베트남 등의 수출국과 인도네시아·필리핀·방글라데시 등 수입국, 중국·인도 등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가로 명확하게 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만은 과일 속에서도 일정수준의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2009년 11월 전망에 의하면, 2009년산 세계 쌀 생산은 정곡기준으로 4억 3,210만톤으로 전년대비 3.1% 감소하였고, 소비는 4억 3,680만톤으로 0.3% 증가하였다. 재고율은 19.7%로 전년에 비해 1.1% 포인트 감소하였다. 곡물은 생산량 대비 무역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서 쌀의 무역율은 6% 정도로 곡물 중 가장 낮다. 그래서 약간의 수급 변동이 대폭적인 가격 변동을 초래한다.

지난번의 쌀 파동은 의외로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곡물과 마찬가지로 2006년 하반기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이 계속되어 2008년 상반기에는 가격폭등에 따른 물량확보가 곤란하여 아시아에서 대 폭동이 일어났다. 필리핀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소비 증가, 이라크 수입증가, 베트남·인도·중국 등 수출국의 국내 수요량 확보를 위한 수출규제 등에 의한 것이었다. 2008년 5월 태국 수출가격이 톤당 1,000달러를 훨씬 넘어섰다. 이후 베트남의 수출 재개와 생산 증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겨우 시장 안정을 회복하였다.

2009년 가격은 톤당 500달러 수준의 안정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공급부족에 의해 수급불안 사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쌀 생산은 2000년 이미 4억톤을 돌파하였으나 2001년

3억 7,890톤으로 감소한 이후 7년 연속을 증산을 해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0월 초 금년 쌀 생산은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 상승의 요인은 인도와 필리핀에 있다. 인도는 10월 중순 이후 한발에 따른 감산이 예상되어 수입관세를 폐지, 300만톤의 쌀 수입이 보도되면서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는 금년도 쌀 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1,700만톤 이상 감산할 것으로 미국 농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수입실정이 없었던 인도는 내년도 40만톤을 수입하게 된다.

지난해 쌀 폭동의 험한 경험을 한 필리핀은 생산증가와 안정적인 수입에 노력한 결과로 시장안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태풍 피해로 10월 들어 내년도 수입쌀 입찰을 시작하였고, 더구나 수입량은 지난해의 230만톤을 상회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한편 최대 수출국 태국에서는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가 비축을 늘림에 따라 수출물량의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태국의 장립중 수출지표가격은 톤당 600달러를 넘어섰다.

향후 불안 요인은 남아 있다. 엘니뇨가 내년 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에서 쌀과 남미에서 대두와 옥수수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대응도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까지 95%의 자급률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축을 강화하면 시장교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달러 약세도 변수다. 시카고 시장에서 투기자금이 실수요자를 상회하고 있다. 투기자금이 곡물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되었다.

세계 기아인구는 1990년 이후 8억 명을 추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년도 10억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지난 6월 FAO는 전망하였다. 곡물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아진 계층이 개도국에서 늘어났고, 금융위기 영향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이 감소한 결과다.

## 글로벌 시야에서 쌀 수급조절 필요

쌀 과잉에 고민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야에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도움받은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입장이 바뀌면서 '기여외교'가 국정과제이다. 현재의 공급과잉은 수급조정을 국내에 한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다. '동아시아긴급쌀비축사업(EAERP)이나 '세계 기아문제 해소'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 개도국에 대해 직접적인 쌀 원조를 비롯하여, 육종이나 생산기반, 농기계, 농법 등 높은 수준의 쌀농업 기술지원이 기여외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R**

# 11월 농업 · 농정 주요 동향

## OECD, 우리나라 PSE 수정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국가별 농업보조지표인 생산자지지추정치(PSE)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PSE 산출법이 잘못되었다는 우리 측의 주장을 수용, 2001년 이후의 우리나라 PSE 수치를 수정하였다.

PSE는 1986년 OECD에 의해 개발된 국가별 농업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환율 · 품질 · 소비자 기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PSE는 이를 모두 보조금으로 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한우의 경우 수입쇠고기와의 품질 차이가 크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고 가격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PSE는 60%(2007년 기준)로 아이슬란드의 61%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EU의 PSE는 26%, 미국은 10%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처럼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큰 국가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주 적음에도 PSE 수치만 볼 때 아주 높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OECD가 수용한 새로운 PSE 산출방식(관세만 이용해 산출)에 따른 2001~2007년 우리나라 평균 쇠고기 PSE는 62%에서 29%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축산물 PSE도 62%에서 58%로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우리 정부는 관세 이외에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개입을 하지 않다는 점을 OECD에 적극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국산과 수입산 간 품질 차이를 인정받아 쇠고기 이외의 다른 농축산물의 PSE 산출 방식도 개선하는 등 추가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무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8일~11월 17일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신 · 경분리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신용사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구조개편을 추진해왔으며, 이와 별개로 농민단체, 농협, 학계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 신 · 경분리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입법예고된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 농협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여, 농협연합회와 NH경제, NH금융 등 2개 지주회사 및 자회사 체제로 개편한다. 연합회는 교육 · 지도 · 감사 · 농정활동 등 교육 및 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경제 · 신용사업 부문은 NH경제, NH금융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담당한다.

본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협개혁위원회(이하 농개혁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농개혁 공식 해체를 선언하는 등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농개혁위는 입법예고안이 경제사업을 잘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상호금융연합회를 별도 규정으로 설립을 보류하고 자본금 배분 문제는 언급을 누락하는 등 농개혁위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민단체 역시 이에 반발하여 지난 11월 13일 23개 농민단체와 농업계 인사 등이 참여한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1월 17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어, 이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 · 반영한 뒤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 현황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품목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 19개 대상을 선정하여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11월 23일 현재 설립 완료된 품목은 9개(감귤, 넙치, 우유, 백합, 단감, 김, 사과, 배, 인삼), 11월 중 추진 중인 품목 3개(배추, 딸기, 버섯), 연내 설립 목표인 품목은 17개(쌀, 마늘, 고추, 토마토, 포도, 닭, 달걀, 오리, 양봉, 양파, 파프리카, 한우, 양돈, 고등어, 멸치, 오징어, 전복)이다. 감귤과 넙치는 지난해 12월 설립되었고, 우유는 기존의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대표조직 구성을 마쳤다. 사과와 배는 지난 11월 19일과 23일에 조직화되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로 설립된 대표조직의 조직화 정도와 역량에 따라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정책 파트너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대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사업 지원 시 대표조직 구성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사업 지원체계를 대표조직 중심으로 통합해 나갈 방침이다. 즉, 기존에 지자체가 담당하던 정부와 농가 간 연결고리 역할을 앞으로는 대표조직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기 선정된 29개 품목 이외에 생산 규모는 적으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대표조직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 미래정책연구실)

##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 더욱 유익한 제도이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 이용자 본인 부담, 주민 인지도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박대식·최경환 연구위원, 윤병석 초청연구원이 최근 연구한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밝혔다.

또한 연구 결과 등급판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1~3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치매나 우울증과 같이 장소, 시간 등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급여의 공급불균형도 문제로 나타났다. 방문요양은 대체로 공급과잉 상태여서 요양기관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설급여(입소) 기관은 대도시 근교 농촌의 경우 공급과잉 상태이다. 요양보호사들의 보수도 시간당 6,000~8,300원으로 낮고, 대부분 시간제 고용이어서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자 본인부담이 과중한 데 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50~60만 원이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월 12~17만 원이 소요되어 저소득층

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충남 청양군, 경북 고령군, 전북 진안군, 경기 양주시에서 현장 면접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물론 이장이나 지역유지들조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과제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농어촌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방안의 개선, 장기요양급여의 공급 불균형 시정,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관리 개선,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생산 및 공개를 제시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및 농어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연구결과는 홈페이지(www.krei.re.kr)에 게시되었고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박대식 연구위원(☎ 02-3299-4345, pds8382@krei.re.kr), 최경환 연구위원(☎ 02-3299-4348, kyeong@krei.re.kr), 윤병석 초청연구위원(☎ 02-3299-4175, dd329@krei.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 ‘전통주 국내외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최근 ‘전통주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연구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의뢰를 받아 전통주의 생산 및 유통 실태와 산업적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일본 청주와 중국 소흥주, 독일 맥주, 프랑스 포도주 등 유명주류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전통주를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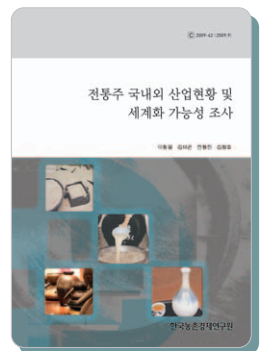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3개 주류에 대해 1,425개의 제조 면허가 발급되었다. 주종별로는 막걸리가 77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주 180개, 과실주 131개, 맥주 99개, 리큐르 89개 등의 순으로 면허가 발급되어 있다.

2009년 8월 현재 가동 중인 60개 전통주업체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자본금은 6,045만원으로 자본금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업체가 66.7%, 1천만원 미만인 업체도 28.3%에 이르고 있다. 매출액은 업체당 평균 7억7960만원으로 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하가 31.9%, 1천만원 미만인 업체도 14.9%나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전통주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주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업체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전통주 산업발전계획 마련,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지원, 전문인력 양성, △소비자의 건강과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과정 재정비, △전통주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전통주품평회’를 체계화하고, 전통주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주점을 겸한 갤러리 형태의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에 필요한 시설규제의 완화, 거래상대방 제한 완화, 양조주점 허용과 인터넷판매 자율화 등 유통규제의 대폭 완화,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고도주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저도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도록 주세체계 재정비, △주류의 규격과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무를 강화하여 차별적 유통체계 확립, △전통주의 수출증대를 위해 한식의 세계화 정책 또는 방안과 연계하여 현지 홍보·판촉을 강화하고,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전략창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컨설팅,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내의 부처 간의 역할분담, △전통주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별도의 [전통주 등 주류산업 진흥법(안)]의 제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02-3299-4342, ldphil@krei.re.kr), 김태곤 연구위원(☎ 02-3299-4241, taegon@krei.re.kr), 전형진 부연구위원(☎ 02-3299-4324, hjchon@krei.re.kr), 김창호 연구위원(☎ 02-3299-4288, chkim@krei.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KRE리porter 지역대표 워크숍 개최



지난 11월 16일~17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KRE리porter 지역대표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구원은 11월 16일~17일(1박2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KRE리porter 지역대표 워크숍을 개최했다. 권역 및 지역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장의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KRE리porter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오세익 원장은 워크숍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KRE리porter 발족 이후 80여 건의 리포트를 포함, 총 160여 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촌현장의 여론과 정책수요를 발굴해 연구와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지역대표 워크숍을 통해 좀 더 활발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12월 중으로 지역별(도별) 리porter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갖는 것과 활동 활성화 방안, 내년 전체 연합회 계획 등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의 권역대표와 지역대표 체제의 리porter 조직을 중앙회와 지회 체제로 개편하여 효율화하기로 했으며, 중앙회 회장에 경북대표인 최태봉 리porter를 선출했다.

연구원은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리porter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원과 농촌 현장과의 정보채널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캄보디아 농촌개발 회의

캄보디아 농촌개발 소액금융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협의회의 회의가 11월 26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중혁 한경대 교수 등 전문

가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농촌개발 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 연구진 동정

△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11월 24일과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에 관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11월 12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열린 DDA/FTA 포럼에서 FTA의 소득 영향 추정에 대해 발표했다.

△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은 11월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FTA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송주호 연구위원은 11월 18일 신라호

텔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세미나에서 ‘DDA 농업분야 협상 동향 및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석현덕 연구위원은 11월 26일과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수목원·생태숲분야 연찬회에서 ‘수목원·생태숲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김병률 연구위원은 11월 20일 제주 칼호텔에서 전국중도매인연합회가 개최한 수련회에서 ‘한국 농업의 비전과 유통선진화’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11월 13일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주 농업 아열대농업 발전포럼에서 ‘온난화-기후변화, 제주농업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송미령 연구위원, 김정섭 부연구위원, 권인혜 초정연구원은 11월 11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그린국토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녹색성장형 농어촌 지역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미령 연구위원은 11월 24일 영암군청에서 영암군 지역혁신 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광특회계 개편과 지자체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김경필 연구위원은 11월 9일 농업연수원에서 ‘한국 농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우병준 부연구위원은 11월 9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의역학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수의역학 및 가축질병 관리의 경제학’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중국 국제교류협회와 워크숍



11월 11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중국 국제교류협회와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11월 11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중국 국제교류협회와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성재 부원장 사회로 열려 허장 연구위원이 새마을운동의 기원과 기본정신, 새마을운동 이후의 농촌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한국 농업인의 복지시스템 운영, 새마을운동

과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운동과의 관련성, 한국 농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였다.